광주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 4곳…불나면 속수무책

동구 소태길 3번길·경양로 271번길·남구 덕남마을 안길
도로폭 3.5m 안돼…북구 말바우 시장은 장날 좌판에 막혀
대부분 노후 주택에 마을 주민들 고령층 많아 대피도 취약

광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이 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 연일 광주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은 대부분 긴급 대피가 힘든 고령 노인들이 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2024년 현재 광주에서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은 3곳, '곤란 지역' 1곳이 있다. 진입 불가 지역은 광주시 동구 소태길 3번길, 경양로 271번길, 남구 덕남마을 안길 등이며 진입 곤란 지역은 북구 말바우시장이다.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은 소방차 진입을 위한 최소 도로폭인 3.5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길이 100m 이상 이어진 곳으로, 소방청이 화재에 취약한 구역으로 별도 지정한 도로다.

곤란 지역은 차량 증가와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 주·정차, 시장 상인들의 좌판, 인파 등으로 소방차 출동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이날 찾은 광주시 남구 덕남마을안길은 소방차는 고사하고 승용차 한 대도 들어가기 힘든 '미로'같은 곳이었다.

초입부 도로 폭이 3.5m에 불과하고 깊이 들어갈수록 2.5m까지 폭이 좁아지는 도로가 190m 가량 이어져 있었으며 도로 양 옆으로는 노후한 목조 주택 10여가구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화재에 극히 취약하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덕남마을 안길 골목마다 소화기와 비상소화 장치를 비치했다. 하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고령의 노인인 탓에 소화기 사용법조차 모르고 있었다.

주민 김행희(71)씨는 "이곳이 화재취약지역이라는 말은 들었다. 몇 달 전인가 소방서에서 소화기도 설치해주고 훈련도 자주 나온다"면서도 "소화기 사용법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덕남마을과 나머지 3곳 모두 주변 건물이 노후화돼 있고 거주자들도 70대 이상 고령의 노인들이 대다수였다.

동구 경양로 271번길 또한 도로 폭이 2~2.5m에 불과한 도로가 160m 가량 뻗어 있고, 도롯가에는 오래된 주택이 빈 공간 없이 들어차 있었다.

도로 입구에는 화재 진압을 위한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돼 있었으나, 호스 길이는 50m에 불과해 골목 안에 있는 25여가구를 모두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였다.

동구 소태길3번길 또한 폭 3.5m의 좁은 길이 100m가량 이어져 있었으며, 그나마 폭 7~8m 수준으로 넓은 인근 도로에도 차량들이 곳곳에 주차돼 있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다.

주민들은 "소방차는커녕 119구급차도 골목 안으로 못 들어온다"며 "구급대원들이 안쪽까지 직접 뛰어와서 환자를 실어 날라야 하는 판인데, 불이나면 큰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북구 말바우시장은 도로 바닥에 '소방차 출동로'라는 문구가 쓰여 있고 대다수 상인들이 좌판을 소방차 출동로에까지 펼쳐놓지는 않아 비교적 안전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평소라면 몰라도 장날이면 상인들이 앞다퉈 좌판을 깔아놓기 때문에 출동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상인 김모(60)씨도 "3~4년 전에 시장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소방차가 크고 길어서 도저히 골목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며 "최근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소방훈련도 하고 상인들도 경각심을 갖고 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소방본부는 이들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을 단기간에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로를 넓히려면 주택을 허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화재 취약 지역으로 특별 관리를 하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광주소방본부는 소방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해주고 대피 훈련이나 화재 초기 대응 훈련 장소로 삼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에 대해 꾸준히 개선책을 내놓고 있으나 길을 넓히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교육, 소방시설 확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만큼, 주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화재 피해 예방 훈련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일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인 광주시 동구 경양로 271번길에서 비상소화장치 너머로 좁은 골목길이 이어져 있다.

문경 공장 화재 소방관 2명 사망…광주·전남 소방관도 안전 우려

최근 5년 1명 순직·39명 부상
심리상담도 2만6000건 넘어

문경 공장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광주·전남 소방관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에서는 7명의 소방관이 화재 진압 중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4건, 2020년 0건, 2021년 1건, 2022년 0건, 2023년 2건 등이었다.

전남 화재 현장에서는 최근 5년동안 소방관 32명이 부상을 입었다. 각각 2019년 9건, 2020년 6건, 2021년 5건, 2022년 5건, 2023년 7건 등이다.

구급·구조 현장에서 순직한 이도 있었다. 지난 2020년 7월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에서는 순천소방서 산악119구조대 소속 소방관이 수난사고 구조활동을 벌이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재난 현장을 경험한 소방관들의 정신 건강도 심각한 상태다.

광주소방본부에서는 최근 5년 동안 PTSD(외상성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등 이유로 6437명의 소방관이 8033회 심리상담을 받았다. 상담 건수 또한 2019년 1364회, 2020년 1323회, 2021년 1465회, 2022년 1616회, 2023년 2265회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남소방본부 또한 찾아가는 직원 심리상담실을 운영해 2019년 3000회, 2020년 4035회, 2021년 2976회, 2022년 3700회, 2023년 4427회 등 5년간 1만 8138회의 상담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소방관들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회복 체계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철 호남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한 명의 소방대원을 잃으면 함께 활동한 팀원들을 비롯해 수많은 소방대원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다. 또 순직자의 빈 자리를 채우느라 신체적 피로도 누적돼 부차적 피해까지 생길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제도와 시책을 통해 이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치료사를 매칭해 심리적 치유를 받고 인원 보충까지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일 경북 문경시에 있는 육가공 제조업체 화재 현장에서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김모(27) 소방교와 박모(35) 소방사가 화재를 진압하다 고립돼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신주 배전선로 보수 작업하던 50대 감전

1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신안군 팔금면에서 전신주에 올라 배전선로 연결 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57) 씨가 감전됐다.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 있던 한전 감독관이 고압 스위치를 오조작하면서 감전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한전 관계자는 "송전을 잘못 지시하거나 한전 직원이 실수한 것인지 등은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

금품 받고 해외도피 중 자수 전 광주시의원 구속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 청탁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환(40) 전 광주시의원이 구속됐다.

1일 광주지법 영장전담 윤명화 판사는 뇌물수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최 전 의원이 이미 해외로 도주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는 등 방어권을 포기했다. 결국 최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류심사로만 진행됐다.

검찰은 광주시의원이던 최씨가 지난 2020년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유치원을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자 2020년 6월 필리핀으로 출국해 잠적했다.

그는 필리핀에서 캐나다에서 옮겨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하다 건강이 악화돼 가족과 상의해 자수의사를 밝히고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최 전 의원에게 금품을 주고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관여한 유치원 관계자와 시교육청 간부 등 관련자들은 기소돼 오는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검찰 노동자 31명 임금 6700만원 체불 사업주 구속 기소

수년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인우)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1명의 노동자에게 임금 672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금체불로 구속된 A씨는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후에도 수사기관에 조사에 불응하면서도 임금체불을 계속 해와 구속기소됐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